



상 상 으 로 보 인 타

대한민국의 새로운 청렴문화가 시작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청탁금지법) 2016년 9월 28일 부터 시행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어떤 형태의 금품 수수도 금지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부조차원에서 우리사회가 용인하는 최소한의 금액등은 허용됩니다.

음식물 · 선물 · 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 음식물 : 제공자와 공직자들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 선물 :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5만원**
-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10만원**

청탁금지법은 깨끗한 나라, 신뢰의 대한민국을 위해 만든 법입니다.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공직자등

- 국가·지방공무원
- 공직유관단체·공공 기관의 장과 임직원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공무수행 사인(私人)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 공공 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
- 공공 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 심의·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외부전문가 등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접대문화 NO,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 공직자 등의 직무상 지위 권한을 이용한 특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공직자 등에게 민원 등 특정 행위 요구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제기합니다.
-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없어도 공직자 등에게 불필요한 금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위법한 부정청탁, 금품수수는 소속기관 등에 신고합니다.
- 공직자 등은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동일한 부정청탁을 2회 이상 받으면 소속기관에 신고합니다.

국민권익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국민이 행복한 나라

QUARTERLY MAGAZINE OF ACRC

CONTENTS 2016 WINTER



18

ACRC on

- 04 스페셜 1**
청탁금지법 시행! 국민권익위원회 김 사무관의 하루
- 08 스페셜 2**
청탁금지법 시행, 당신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 10 스페셜 3**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홍보대사 위촉식
- 12 증인**
국민권익위원회 들여다보기 - Part 4. 행정심판국
- 16 사례 돋보기**
당신의 담배 한 모금이 누군가에게는 독약입니다
- 18 현장 24시 1**
비긴급 전화 상담 콜센터 개소식
- 20 현장 24시 2**
경기도 동두천시 현장조정회의
- 22 현장 귀 기울이기**
교통도로민원과의 고충민원 해결 이야기
- 24 민원 빅데이터**
출산장려금 관련 민원분석
- 26 ACRC 리포트**
한국-베트남 반부패 MOU 연장체결



28

THEME on

- 28 테마칼럼**
행정심판의 발전과 미래
- 30 독자 에세이**
마음까지 보듬어준 당신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32 선진국 가이드**
호주 반부패위원회



38

CULTURE on

- 36 한입의 행복**
떡볶이, 종이컵에 담긴 빨간 추억 1인분
- 38 그곳에 가면**
한겨울에 핀 성곽건축의 꽃, 경기도 수원 화성
- 42 2016 트렌드**
유리병에 담은 나만의 작은 정원, 테라리움
- 44 생활법률상식**
아르바이트 노동자 권리침해 사례와 구제 방안
- 46 힐링 컬러링**
나만의 겨울 풍경을 만들어 주세요!
- 48 문화 초이스**
다가오는 연말,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면?
- 49 카툰**
국민권익위원회 카툰
- 50 ACRC 뉴스**
국민권익위원회 뉴스
- 52 소통마당**
독자의견과 퀴즈

스페셜 1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 김 사무관의 하루

2016년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식 약칭 '청탁금지법'이 드디어 시행되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제도의 정착을 위해 국민권익위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청탁금지법의 제도운영, 법령해석, 교육·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권익위 청탁금지제도과 김 사무관의 일과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글·편집실



오전 8시 30분

활기찬 아침, 전화상담으로 하루를 시작

김 사무관은 어제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업무가 있어 평소 출근시간보다 조금 일찍 사무실에 도착하였습니다. 법제·법령해석을 담당하시는 박 사무관님은 어젯밤 늦게 퇴근할 무렵에도 사무실에 계셨었는데, 아침에도 여전히 컴퓨터와 씨름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오늘 개최될 정부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 안건 준비 때문에 바쁘신 것 같습니다. 자리에 앉아 업무를 시작해 보지만 이내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합니다. 최근에는 각종 문의전화의 폭주하고 있어 연결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업무시간 전에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분 한분 성심성의껏 친절히 응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최근 질의들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것들이어서 즉시 답변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정확한 설명보다는 일관되고 명확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석 질의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자료에 대한 요청도 많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는 국민 또는 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뉴얼·해설집·사례집 등 각종 책자, 리플릿·동영상 등 홍보자료, 교육용 교재 등을 국민권익위 홈페이지의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 코너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전 10시

명확한 해석 기준 정립과 오해·우려 불식을 위한 노력



청탁금지법 시행이 약 1개월 조금 넘는 지난 11월 초, 공문·홈페이지·민원 등으로 제기된 질의는 10,000건이 넘었습니다. 110 정부민원안내 콜센터에서도 청탁금지법 전담상담팀을 운영 중이며, 청탁금지제도과에서도 부서원 모두가 하루 종일 상담도 하고 법령해석 담당자들은 접수된 순서에 따라 민원 회신 및 문서 답신을 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모든 궁금증이 해소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쟁점화된 이슈의 일관된 해석기준을 정립하고,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를 매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법제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함께 참석하고 있으며, 현안사항에 대하여 긴밀한 상호 협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도출된 입장이나 법령해석 기준에 대해서는 매주 보도자료 배포·게시, 브리핑 등을 통하여 국민들께 알리는 노력을 병행합니다. 오늘 오후 4시에 회의라고 하였으니 박 사무관님은 조금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쟁점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국민 인식과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

오후 3시

청탁금지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법의 내용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하는 교육·홍보 노력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권익위는 법 시행을 앞두고 권역별 설명회, 직종별 청탁방지담당관 교육 등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이버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9월 시행에 발맞춰 교육을 개시(청렴연수원)하였고, 각급 기관·단체·기업에 교육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 온라인 매체에서 누구나 손쉽게 접근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홍보를 위해 다방면의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국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한 FAQ와 해석지원 T/F의 회의를 통해 도출된 해석기준을 알기 쉬운 카드뉴스 시리즈로 제작하여 배포하기 위해 김 사무관과 홍보담당관실 직원이 관련 업체와 회의를 하였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김 사무관은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는 더 많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한 번 더 고민을 해 봅니다. 시행 이후에도 법의 긍정적 기대효과 등 국민들께 알려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 청탁금지법의 큰 힘

저녁 8시

오늘도 김 사무관은 늦은 퇴근을 합니다. 퇴근길에는 항상 '과연 최선을 다한 것일까'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최근 한국 갤럽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10월 기준, 청탁금지법의 시행이 잘된 일이라는 국민들의 지지도가 71%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5월 시행령(안)이 입법예고 되었을 때의 지지도 66%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그만큼 청탁금지법에 대해 국민들께서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알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법의 성공적 시행을 통해 새로운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청탁금지제도과 미니인터뷰



Q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부서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T/F형태로 운영되던 우리 부서가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과 동시에 청탁금지제도과로 신설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일 것입니다. 각 부처에서 파견을 받아 구성원도 보강이 되었고, 사무실도 새로 꾸며져 쾌적한 근무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일은 고되지만 가끔씩 부서원들끼리 서로 마주보며 웃을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 현재 청탁금지제도과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하시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시행 1개월이 지난 현재 홈페이지 및 공문 등을 통해서 많은 질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아무래도 여건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 합동 해석지원 T/F를 운영하여 법 해석의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고 혼란을 느끼시는 사항 위주로 FAQ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현재까지 업무상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무엇인가요?

지난 7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이후 공문, 민원 및 홈페이지를 통한 질의가 폭증하였습니다. 모든 부서원들이 이러한 질의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질의에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질의들은 매우 구체적인 법적용과 관련된 사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어 즉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점이 저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원들의 애로사항일 것입니다.

Q 담당자로서 보람을 느끼거나 뿌듯했던 일이 있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담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라는 우리사회의 관행을 타파하고 청렴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자 제도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들 때마다 제가 하는 일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느끼곤 합니다.

Q 청탁금지법이 시행 초기로 아직은 혼선도 있지만 꼭 시행되어야 하는 법이라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을 일으켰습니다. <국민권익> 독자들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담당자로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응원 전화를 받을 때마다, 인터넷 기사 등에서 긍정적 반응을 확인할 때마다 부서의 모든 직원들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공감하고 참여할 때 법의 제정목적은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공식 약칭은 '청탁금지법'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페셜 2

청탁금지법 시행, 당신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3달째다. '관행'이라 불리며 암암리에 행해지던 청탁문화, 접대문화가 엄격한 '법'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우리 사회의 모습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곳곳에 빛과 그림자가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 일상에 청탁금지법이 서서히 물들고 있다.

글·편집실

Before



빠곡히 채워져 있는 저녁 약속

공직자, 기업 홍보담당자, 언론인 등은 저녁 시간이 근무시간 못지않게 바쁜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저녁식사 자리는 근무의 연장이다. 정보 교류, 인적 네트워크 확장 및 친목 도모를 명목으로 마련한 저녁식사 자리에는 값비싼 메뉴가 가득하고 그 옆에는 단짝 친구마냥 술이 놓여 있을 때가 많다. 대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혹시나 아쉬운 소리가 나올까 식사 자리가 결코 편하지만은 않다. 하지만 이렇게 대접하는 보람이 있겠지 생각하면 결코 힘든 일만은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적당히 1차에서 마무리하면 좋으려면 2차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그날 하루도 귀가 시간은 늦춰져만 간다.

업무 관련 인사들과의 잦은 저녁 약속과 이어지는 늦은 귀가로 피로는 쌓여만 가고, 식사 약속이 없는 저녁이면 못 다한 업무에 야근이 기다리고 있다. 반복되는 이러한 생활에 가족들과 함께 하는 저녁 식사, 자기계발, 그리고 취미활동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 주말이 유일한 휴식시간인데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친목 골프로 집에서 쉴 수 있는 시간은 짧기만 하다. 이렇다 보니 가족들의 원성은 자자하고, 이를 알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당사자는 지쳐가기만 한다. 그저 업계의 '당연한' 일이라며 씩씩하게 스스로를 위로할 뿐이다.

After



저녁이 있는 삶

청탁금지법 시행 후 점차 저녁이 있는 삶으로 변하고 있다. 과도하게 이루어지던 저녁 약속이 사라진 것이다. 이를 반영하는 듯 퇴근 후 취미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저녁 약속과 술자리가 줄어들면서 직장인들이 백화점 문화센터를 찾고 있다. 한 백화점 통계에 따르면 명동, 강남, 영등포 등 서울의 주요 지점의 경우 오후 7시에 시작되는 강좌들 중 일부는 정원이 꽉 찼으며, 기존에 수강생이 적었던 오후 8시, 9시 강좌들에 대한 문의도 크게 늘었다고 한다. 주로 주부 수강생들이 몰리는 낮 시간대 강좌의 인기가 높았던 것에 비하면 이례적인 결과라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2차 문화의 감소도 청탁금지법이 변화시킨 또 하나의 긍정적인 변화이다. 한 카드사의 조사에 따르면 2차 문화로 대표되는 유흥주점에서의 법인카드 이용이 5.7%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요식업종은 법인카드 이용이 고급매장 중심에서 중저가 매장으로 확산됐고, 저녁 평균이용 시

간도 한 시간 정도 앞당겨 졌다. 저녁시간대 이용건수를 보면 밤 9시 이전에 결제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간단한 회식문화가 우리 사회에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차 문화가 감소하는 반면 가족과 함께 하는 저녁 식사가 증가하는 추세다.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편의점에서 간단한 먹을거리를 구입하는 것과 같이, 외부 식사 모임보다는 '집밥'을 즐기려는 음식 매출이 증가하였다. 한 대형마트의 경우 신선식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하였고, 한 편의점의 경우 도시락 판매액이 240% 급증하는 등 이 같은 현상은 직장인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저녁 약속 자리가 줄어든 것은 맞지만, 저녁이 있는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 짓기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시간의 여유가 생겨 체력 단련이나 자기계발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반응이 함께 나오고 있어 앞으로 더욱 변화될 우리 사회의 모습이 기대된다.

청렴, 할 수 있다!

양궁 장혜진-펜싱 박상영 국민권익위 청렴 홍보대사 위촉

청렴한 국가는 강력한 법체계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청렴에 대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이 청렴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청렴 문화를 더욱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2016 리우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청렴 홍보대사로 선정하였다.

글·편집실



부패 없는 정정당당 우리나라 만들기

국민권익위는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청탁금지법의 조속한 정착을 향한 보다 효과적인 홍보 활동을 위해 청렴 홍보대사를 위촉하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2016년 리우 올림픽 양궁 2관왕 장혜진 선수와 펜싱 남자 에페 금메달리스트이자 세계 랭킹 1위 박상영 선수를 청렴 홍보대사로 선정했다. 장혜진 선수의 경우

다른 스포츠에 비해 투명하고 공정한 양궁 국가대표 선발 과정이 청탁금지법의 취지인 '공정한 경쟁', '부정부패 척결', '청렴한 사회구현' 등과 이미지가 부합돼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또한 리우 올림픽에서 기적의 역전승 '할 수 있다!'로 알려진 박상영 선수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연고·온정주의에 기반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패 관행을 없애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선정됐다.

노력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주간(12월 1일~9일)*의 시작일인 12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장혜진 선수, 국민권익위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홍보대사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날 위촉식은 성 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했다. 성 위원장은 "공정한 경쟁과 각고의 노력으로 국민에게 큰 감격과 기쁨을 안겨준 두 스포츠 스타가 청렴 홍보대사를 흔쾌히 수락해 줘 감사한다"며 앞으로 두 청렴 홍보대사가 공정경쟁과 집념의 상징으로서 청탁금지법의 정신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참여를 높여주는 데 역할을 다 해주기를 당부했다.

장혜진 선수는 이 자리에서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이 투명한 시스템과 오직 노력과 실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보여줬듯이 우리 사회도 각자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일정으로 이날 위촉식에 참석하지 못한 박상영 선수는 "국민 모두가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각자 위치에서 노력하면 청렴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며 홍보대사 선정에 대한 소감을 전달했다.

장혜진 선수와 박상영 선수는 앞으로 반부패,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홍보와 캠페인, 이벤트 등 주요 행사에 참석해 청렴문화를 확산하는 '청렴 전도사' 역할을 할 예정이다.



*반부패 주간

국민권익위는 UN이 지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을 기념하여 12월 1일부터 9일을 반부패 주간으로 정하였다. 이 기간에는 청렴컨퍼런스, 지역별 반부패 캠페인, 청렴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며, 이를 통해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UN은 지난 2003년 12월 멕시코 메리다에서 'UN 반부패 협약' 조인식이 열린 것을 기념해 매년 12월 9일을 세계 반부패의 날로 지정한 바 있다.

청렴 홍보대사 소개



양궁 장혜진 선수

-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양궁 여자 개인전 금메달
-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양궁 여자 단체전 금메달
-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양궁 리커브 여자 단체전 금메달
-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양궁 리커브 여자 개인전 은메달



펜싱 박상영 선수

- 펜싱 남자 에페 세계 랭킹 1위 등극
- 2016년 부에노스아이레스 월드컵 펜싱 남자 에페 개인전 금메달
-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펜싱 남자 에페 개인전 금메달
-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펜싱 남자 에페 단체전 금메달

중인

블로그기자단과 함께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들여다보기

part4. 국민의 보호를 위해 밤낮없이 달리는 행정심판국

친바람이 옷깃을 스치는 11월, 국민의 보호의 마침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심판국에 다녀왔습니다. 행정심판국의 행정심판총괄과, 행정교육심판과, 사회복지심판과, 운전사건T/F 등 4개 부서 담당자와 인터뷰 꽃을 피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정심판국이 말하는 행정심판 이야기부터 분야별 상세 업무까지 생생하게 들어보실래요?

글 · 강지은(블로그기자단)

먼저 행정심판국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심판총괄과'에 찾아가 행정심판을 전체적으로 알아본 후 부서별 담당자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정심판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행정심판의 핵심 역할과 기능에 관해 질문하였습니다.

Q 행정심판이란 무엇이고, 소송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A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으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을 경우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준사법적 절차입니다. 특히 행정상의 문제가 법원에서 다루어지기 전에 행정기관이 스스로 판단하여 바로잡을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점이 행정심판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또한,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반드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Q 행정심판은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아주는 마침표 역할을 하고 있군요! 그럼 행정심판총괄과의 주요업무는 무엇인가요?

A 행정심판총괄과의 업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첫 번째로는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이 상정되어 심리·재결되는 곳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회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계획 및 회의일정을 수립하고 회의를 보좌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행정심판총괄과'라는 부서 이름에 걸맞게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총괄·조정 기관으로서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거나, 행정심판 제도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 등을 개선·발전시켜 국민의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총괄과
김용호 사무관

66

행정심판총괄과의 업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첫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운영, 둘째 '행정심판총괄과'라는 부서 이름에 걸맞게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총괄·조정 기능입니다.

99

행정심판은 국민권의 구제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행정심판총괄과에 대해 알고 나니, 심판 분야별로 나누어진 과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행정교육심판과와 사회복지심판과, 운전사건T/F를 차례로 찾아갔습니다.

Q 행정교육심판과가 다루고 있는 분야가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주요 업무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A 행정교육심판과는 '일반행정'과 '교육'에 관한 심판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행정심판 청구사건 관련 각종 신청에 대한 검토 및 조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조사와 검토과정을 통해 발견된 불합리한 법령과 관행에 대한 개선 권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다루고 있는 분야로는 학교폭력, 학교법인 등의 교육 분야, 출국금지, 체류자격 변경 등의 출입국 분야, 병역처분, 병역감면 등 병무 분야가 대표적입니다. 이렇듯 타 부서보다 사람 그 자체, 또는 사람의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 강제, 의무 부과 등에 관한 것들이 많아 사안의 민감도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행정교육심판 사례는 무엇인가요?

A 지난해 가을에 재결된 '여권 영문성명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입니다. 청구인의 여권 영문성명이 'DUCK'이라고 표기되었는데, 그 의미가 '오리, 업무회피' 등 부정적으로 쓰인다는 이유로 'DEOK'으로 변경해 달라고 담당 행정청에 요청하였습니다. 담당 행정청은 출입국관리의 일관성 유지 등을 이유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영문성명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상 'DEOK'이 원칙이고, 외국에서 학력이나 경력 증명 시 영문성명 불일치로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거부처분이 가혹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손을 들어준 사례입니다. 당시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사례로 알파벳 한두 자 바꾸는 것이 사소하게 보일 수 있지만, 정작 청구인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새삼 생각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Q 행정교육심판과는 _____이다. 행정교육심판과를 한 단어로 표현 부탁드립니다.

A 행정교육심판과는 '행복 나눔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밥을 짓기 전 조리료 쌀알 사이의 돌을 골라내듯 행정청에서 하는 일의 절차와 내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교육심판과
김원한 서기관

66

행정교육심판과는 '일반행정'과 '교육'에 관한 심판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사건 관련 각종 신청에 대한 검토 및 조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99





사회복지심판과
박영아 사무관

Q 국민들이 주로 어떤 문제로 사회복지심판과에 심판을 청구하나요?

A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근간으로 이루어지는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과정에서 행정청과 기업 및 근로자 사이에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심판을 청구합니다. 예를 들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고를 당해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등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징수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Q 사회복지심판과는 _____ 다. 그리고 그 이유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A 사회복지심판과는 '갈등을 푸는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위의 사례들처럼 고용·노동 행정의 분쟁에 관한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적 쟁점이나 법리에 관한 판단이 매우 까다롭지만 얽히고설킨 갈등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갈등의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당사자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공정한 행정심판의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 검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6

사회복지심판과는 '갈등을 푸는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위의 사례들처럼 고용·노동 행정의 분쟁에 관한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99

Q 운전사건T/F의 하루 업무를 소개해주세요.

A 보통의 경우 출근 후 신규 안전을 배정받습니다. 각종 서류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신규 안전을 확인하고 처리한 후, 기존 청구권에 대한 보충서면 자료를 정리합니다. 위와 같은 사전 작업을 완료하면 본 안전 정리를 시작합니다. 안전 제출, 안전 상정, 재결서 작업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지게 됩니다.

Q 운전사건T/F는 다른 부서보다 늦게 결성된 팀이라고 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2011년도부터 운전사건에 대한 업무가 증가하면서,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전담팀이 필요하다는 대내외적 의견으로 결성되었습니다. 처리 절차나 시스템은 일반사건과 유사하지만 '운전'이라는 특정한 대상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팀은 공익법무관 두 분과 행정심판 각 부서원 중 운전사건과 관련하여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적된 재결례 등을 참고하여 전문성을 쌓아갈 것입니다.

행정심판총괄과를 포함하여 각 부서의 담당자와 인터뷰를 마친 후, 국민에게 있어 행정심판은 필수적인 '국민권익보호의 마침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용 측면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제도라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보호하는 행정심판총괄과의 업무는 지금 이 순간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운전사건T/F
김미숙 사무관

66

운전사건 관련 신규 안전을 배정받아 각종 서류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하고 처리한 후, 기존 청구권에 대한 보충서면 자료를 정리하고 후속 조치를 해 나갑니다.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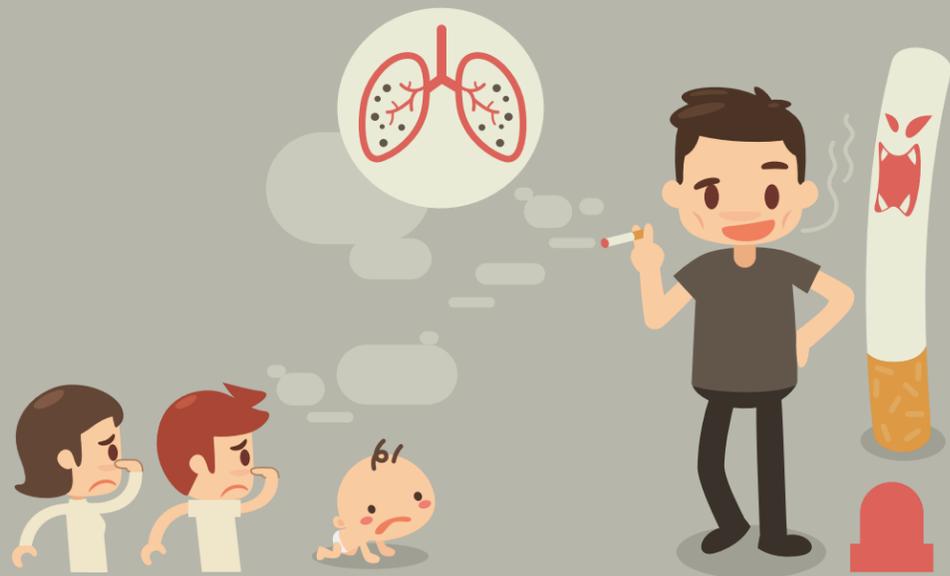


사례 돌보기

당 신 의
담 배
한 모 금 이
누 군 가 에 게 는
독 약 입 니 다

공동주택에서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는 아주 기본이자 중요한 사항이다. 나를 위한 편안한 공간이라는 이유로 무심코 한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아주 큰 피해로 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내 흡연으로 인한 다른 세대의 간접흡연 피해가 바로 그 예다.

글·편집실



내 집에서 담배 피울 수 있는 권리 vs

담배 냄새에서 자유로울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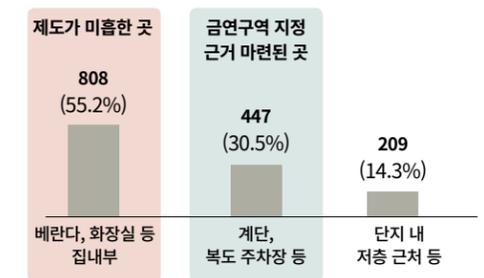
현관 화장실에서 담배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집에 아이가 있는데 그 냄새를 다 맡아야 합니다. 소중한 내 자식이 아침저녁으로 담배 냄새를 맡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간접흡연이 건강에 얼마나 나쁜지 아십니까? 아이들 유전자까지도 바꾼다고 합니다.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참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방송을 내보내면 뭐합니까? 어차피 쇠귀에 경 읽기네요. 경고합니다! 화장실에서 담배 냄새 한번만 더 풍기면 전체를 방문해서라도 찾아내서 싸우겠습니다. 의심 가는 세대가 있지만 일단 경고합니다.

한 아파트 내 게재된 흡연 경고문이다. 한눈에 봐도 작성자가 현재 격앙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는 불쾌감은 물론 심할 경우에는 어지러움까지 유발하는 등 적지 않은 고통을 준다. 내 집에서 자유롭게 흡연할 수 있는 권리와 담배 냄새를 맡지 않을 권리가 상충하며 때로는 커다란 이웃 싸움으로도 번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와 국토교통부는 협업을 통해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2017년 말까지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공동주택 간접흡연이 최근 층간소음보다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자 국민신문고 민원분석 결과와 국민생각함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라 지난 2016년 9월 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 계단·복도 등 공용구역보다 베란다 등 전용구역인 세대 안 흡연에 의한 간접흡연 피해가 더 심각한 실정이었다. 하지만 사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제도적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공동주택 거주민

공동주택 흡연장소 현황 (단위: 건)



※ 2011년부터 2016년 5월까지 접수된 국민신문고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민원에서 분석대상 1,530건 중 흡연장소가 명시된 1,464건을 분석

들은 공동주택 게시판이나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지만 제도적 근거 미비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였다.

국민권익위와 국토부는 이에 대해 국토부가 운영 중인 층간소음 방지 제도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①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층간 간접흡연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②관리주체가 피해를 입힌 입주자 등에게 공동주택 실내 흡연 중단 권고와 사실 관계 확인 조사를 할 수 있으며 ③피해를 입힌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권고 등에 따라 층간 간접흡연 중단 등 협조할 의무를 지게 된다. ④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층간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⑤이를 위해 필요한 자치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공동주택 간접흡연 건에 대해 층간소음 방지 제도를 참조한 이유는 실내 사생활 공간에 적용되는 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에 대해 보다 실효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며, “법 개정 전이라도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배려하여 공동주택 실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다 편리한, 보다 신속한 국민소통창구가 열린다

비긴급 전화 상담 콜센터 개소식

재난신고 119, 범죄신고 112를 제외한 모든 비긴급 민원상담전화 110번호로 통합되었다. 이를 공식적으로 알리기 위해 지난 10월 25일 서울 영등포에서 비긴급 전화 상담 콜센터(이하 제2콜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그 현장을 <국민권익>이 함께 하였다.

글·편집실



비긴급 전화 상담 콜센터



민원 전화 상담의 전환을 맞이하다

오전 내내 비가 내리더니 오후 즈음이 되어 화창한 날씨로 바뀌었다. 110 정부민원 안내 콜센터의 새로운 전환점을 알리는 제2콜센터 개소를 하늘도 내심 반기고 있었나 보다.

개소식을 앞둔 시간,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김인수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권태성 국민권익위 기획조정실장,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 최복수 안전처 안전총괄기획관 등 한자리에 모이기 쉽지 않은 귀빈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 이번 제2콜센터 개소는 일반 민원 상담전화를 110번호로 통합하여 국민들이 각종 신고 번호를 검색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이다. 또한, 긴급전화 119(재난), 112(범죄)로 걸려오는 비긴급 민원전화를 110에서 응대함으로써, 일반 민원전화로 분산되는 긴급상황 대응력을 국민 안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보다 신속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니, 관계자들의 얼굴이 설렘으로 가득해 보이는 듯하다.

“국민들은 좀 더 편해지고, 업무 담당자는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쁩니다. 국민들의 편의성과 함께 상담원들이 어려움 없이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의 말에 모두가 공감을 표하며 고개를 끄덕인다.

통합이 만들어낸 힘

윤남기 110콜센터장의 사회로 본격적인 개소식이 시작됐다. 내빈 소개 뒤에 이어진 황호윤 국민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장의 사업추진경과보고는 오늘의 제2콜센터가 개소되기까지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게 한다. 2015년 1월 119·112·110번 통합

방안 추진을 시작으로 2015년 12월 예산확보, 2016년 5월 발주자 선정, 6월 상담직원 교육 등의 과정을 거쳤다. 경과보고는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관계자의 많은 노고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과의 소통 최접점에서 국민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110콜센터는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각종 콜센터를 통합·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번에 개소하는 제2콜센터는 그 연장선상에서 안전 관련 비긴급 전화에 대한 통합대응체제를 마련한 것입니다. 앞으로 제2콜센터를 통해 국민들께서는 여러 가지 신고전화번호를 일일이 기억하지 않더라도 110번에 신고상담을 할 수 있게 되어 민원접근 편의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며 콜센터 개소에 대한 기쁜 마음을 전했다.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약속하다

참석한 내빈들이 함께한 현판제막식이 끝나고 콜센터 순시가 이어졌다. 콜센터 안은 차분한 분위기였지만 상담원 한명 한명은 그 조용함 속에서 최선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리라. 이곳에는 125명의 상담인력이 주·야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2콜센터는 지난 10월 28일, 그동안의 시범서비스를 마치고 전면 서비스 시행에 돌입하였다. 아직 초기단계이지만 교육으로 잘 다져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원들과 원활한 시스템 체계,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삼박자를 이루어 콜센터는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110 정부민원 안내 콜센터가 최고의 국민소통창구가 되길 기대한다.

현장 24시 2

이제는 매일 밤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두천시 지행역 철도소음 저감대책 현장 조정회의

지난 10월 5일, 경기도 동두천시 주민들의 10년 숙원이 속 시원하게 해결되었다.
그동안 소음으로 인해 잠 못 이루던 밤은 잊혀진 기억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글·편집실



우리도 소음 방해 없이 잘 수 있을까요?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수면은 우리 일상생활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경기도 동두천시의 지행역 인근의 800여 세대, 3천여 명의 주민들은 가장 기분이면서도 중요한 이 수면을 10년 동안이나 방해받고 있었다. 동두천시 지행역 인근은 철도변과 불과 10여 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다. 하루에 122회 운행되는 기차와 전철 때문에 주민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수면장애를 겪는 등 생활피해를 호소해 왔다. 특히, 주민들은 휴전선과 가까운 동두천시에 거주하면서 국가안보를 위해 많은 것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로 밤 시간대에 운행하는 군사용 화물열차가 새벽 시간대에도 수시로 지나가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은데 방음벽조차 없다는 것에 불만을 제기해 왔다. 또한 극심한 철도소음 때문에 아기를 키우기 힘들다며 이사를 가고, 주민들을 찾아온 손님과 자식들마저도 일찍 떠나기 일쑤라고 하였다. 이

에 참다못한 주민들은 지난 2016년 5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10월 5일, 그간의 고충을 마무리 짓기 위한 현장조정회의가 동두천시청에서 개최되었다. 회의 시작 전 마지막 현장시찰과 브리핑을 진행하였다. 실제로 본 현장은 놀라웠다. 생각보다도 철도와 주거단지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쯤 되니 왜 서쪽편에는 방음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동쪽편에는 설치되어있지 않았는지 궁금해질 정도였다. 지난 2006년 12월 경원선 전철 건설당시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간 주민들이 감내해야 했던 불편함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다.

오랜 숙원을 해결했다는 보람과 기쁨

조정회의는 50여 명의 동두천시 주민과 신청인, 동두천시장, 한국철도시설공단수도권본부장, 한국철도공사수도권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인수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의 주재로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조정회의에서 동두천시는 지행역 동편에 1.8km의 방음벽을 설치하고 방음벽 설치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의 50%를 분담하며, 방음벽 설치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한국철도시설공단 또한 동두천시와 함께 지행역 동편에 방음벽을 설치하고, 설치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의 50%를 분담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동두천시의 분담금이 납부되는 대로 방음벽 설치공사를 수행하고, 이번 현장조정이 끝나는 즉시 설계 시

작과 함께 설치된 방음벽에 대한 사후 유지관리를 이행하는 데에 동의하였다. 관계기관인 한국철도공사는 향후 방음벽 설치공사 시 철도운행선 인접공사 및 철도보호지구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하였다. 조정회의를 주재한 김인수 부위원장은 "오늘 조정은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소통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소음저감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동두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하면서 동두천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등에 합의된 사항을 잘 이행해 달라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김인수 부위원장의 마무리 말을 끝으로 회의는 종결되었다. 그동안 숙원의 권리를 누리지 못했던 주민들은 "이제 잠 좀 편하게 자겠어!"라고 함께 참석한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또 어떤 주민은 기념촬영을 위해 모인 자리에서 김인수 부위원장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조용히 전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는 누군가에게서 감사의 말을 듣기 위해 현장으로 가지 않는다. 그저 고충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당연한 일을 할 뿐이다. 하지만 이렇게 작은 인사말과 주민들의 행복한 표정은 국민권익위에 늘 최고의 원동력이 되어 주고 있다.



서로에 대한 존중에서 싹트는 화해의 씨앗

교통도로민원과의 고충민원 해결 이야기

“옥천 제2의료기기산업단지 조성 사업 도로개설로 종중 소유 임야가 양분되어 '종중분묘 27기'의 분묘 이장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글 • 교통도로민원과 이상각 조사관 정리 • 편집실



민원인의 마음을 헤아리며 마치 내 일처럼

올해 초 충북 옥천군에서 시행하는 제2의료기기산업단지 조성사업구역에 한 종중의 산과 분묘가 편입되면서 분묘 이장을 둘러싼 민원이 발생했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종중분묘 27기를 모두 이장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민원인은 “인근에 이렇게 많은 분묘를 이장할 만 한 토지가 없을 뿐더러 이장으로 인한 각종 민원 발생과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옥천군이 대체 부지를 선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상 대대로 관리해온 종중분묘를 부득이하게 아무런 연구가 없는 곳으로 이장해야 하는 민원인의 마음이 어떨까. 민원인의 마음을 헤아려보며 혼자 힘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수 있음을 새삼 짐작했다. 산업단지 조성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민원인과 옥천군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으로 민원조정을 시작했다.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협의 또 협의

하지만 민원인과 옥천군의 입장을 모두 존중하면서 협의를 이끌어 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수차례 면담을 거치면서 민원인은 도로개설로 양분되는 종중 임야의 잔여지 중 850㎡는 협의 후 매수하되 나머지 잔여지(2,300㎡)에 자연장지를 조성할 경우 분묘 이장을 위한 성토 등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입장을 정리했다. 궁극의 목적인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민원 요구 사항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됐고 옥천군에 성토 등 개발행위에 대해 법률검토를 하도록 요청한 후 다시 입장을 잡아 재협의를 들어갔다.

수차례 쉽지 않은 조정을 거친 끝에 결국 옥천군은 민원인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기로 하였고, 충북개발공사로부터는 종중분묘를 자연장지를 조성해 이장할시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민원 해결은 끝이 나나 싶었다. 하지만 보통의 민원 해결이 그렇듯 이 민원도 순탄하게 끝나지 않았다. 또다시 넘어야 할 고비가 찾아왔다.

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민원인에게 조정서를 통보했다. 하지만 종중 대표 중 한명이 옥천군 묘지이장과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문

의해 보니 산업단지 지구 내에는 종중묘지를 자연장지로 조성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민원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조정서에 서명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은 생각에 기운이 빠졌다. 하지만 국가 정책사업으로 종중분묘를 부득이하게 이장해야 하는 민원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기로 했다. 결국 산업단지 조성 후에는 자연장지로 조성될 종중 임야 잔여지가 산업단지에서 해제되고,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개발행위에는 문제가 없음을 계속해서 설명하여 이해를 이끌어 낸 끝에 다시 조정회의를 추진하게 됐다.

드디어 지난 10월 25일, 이번 민원해결의 마침표를 찍는 현장조정회의가 열렸다. 그간의 추진 과정과 민원 현장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고, 브리핑 후 조정안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는 질의가 이어진 뒤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다. 민원인은 산업단지 조성 관련 조정서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옥천군 부군수는 민원인이 종중분묘 이장을 위한 자연장지 조성시 최선을 다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옥천군은 고충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한 국민권익위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향후 산업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각오도 다졌다.

그동안의 힘든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민원인의 불편을 해결함과 동시에 산업단지 조성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탠 것 같아 매우 큰 보람을 느꼈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쁨으로

국민권익위는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국민 생활에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 누구라도 찾아간다. 민원의 양측이 순조롭게 합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변수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양측의 강한 주장이 부딪쳐 조정이 극심한 난항으로 빠져들 때도 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내 자신의 민원이라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 이번 사례에서도 이 점을 다시금 느꼈다. 과정이 어렵지만 민원 해결이 국민들의 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 위안과 행복이 될 수 있음을 되새기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출산장려금 관련 민원분석

지자체에서는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주소, 거주기간 등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출산 가정에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0월 10일, 임신부의 날을 맞아 2013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출산장려금 관련 민원 636건을 분석하여 결과를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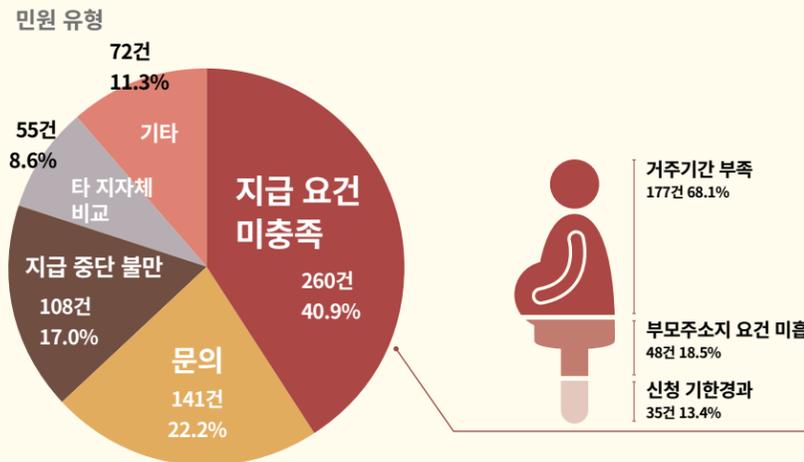
글·편집실



#1

민원 유형 분석

출산 장려금 민원 세부 유형을 분석한 결과 조건 미충족에 대한 이의민원이 40.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자격조건 등의 문의, 지급 중단 불만, 타 지자체 비교 순으로 나타났다. 조건 미충족 이외에 대한 구체적 사항으로는 거주기간 부족(177건), 부모 주소지 상이(48건), 신청기한 경과(35건) 순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함에 대한 이의 민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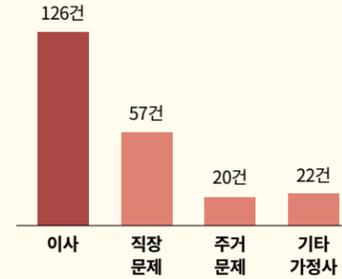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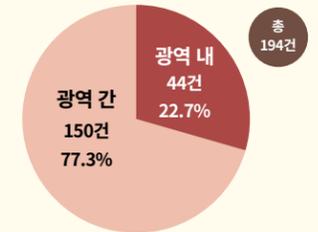
거주 및 주소 요건 미흡 사유

이의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된 거주 및 주소 요건 미흡 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단순이사가 1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사발령 등 직장문제(57건), 주거 문제(2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전 지역 현황으로는 지역을 명시한 194건 중 광역 내 이전이 44건, 광역 간 이전이 150건으로 나타났다.

거주 및 주소 요건 미흡 사유



이전 지역 현황



사례1

혁신도시 내 신규 아파트 입주 문제로 전입이 늦어져 지원받지 못하게 된 사례

○시에서 △△혁신도시 내 신규 아파트를 구입하여 입주 시기에 맞춰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 당시 임신 중이었고, 출산 예정일이 다가와 해당 보건소에 지원여부에 대해 문의하니, 6개월 미만 거주자라 지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 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입주 시기에 맞게 이사했는데, 어느 곳에서도 지원을 받지 못해 속상합니다.

사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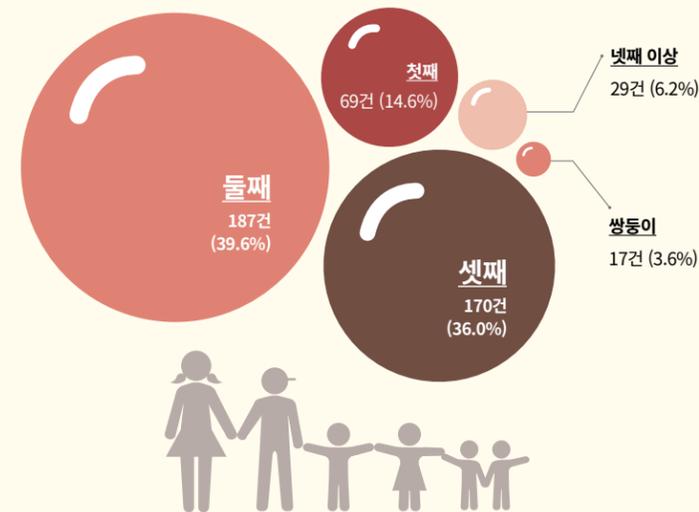
직장 내 인사발령으로 이사 후, 거주 요건이 맞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게 된 사례

셋째 아이 임신 중 직장 인사발령으로 다른 시로 전입했는데, 거주 요건이 출산일로부터 약 한 달이 부족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인사 발령으로 부득이하게 이사했는데, 재정적 부담이 적지 않은 가운데 전에 살던 지자체에서조차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 억울합니다.

#3

대상 자녀별 현황

지원금 대상 자녀를 살펴보면 자녀가 명시된 472건 중 둘째 자녀가 1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셋째 자녀(170건), 첫째 자녀(69건), 넷째 이상(29건)이 뒤를 이었다. 이는 지자체마다 출생순별로 지원금에 차이가 있고, 첫째 아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어 둘째 아이 및 셋째 아이 대상 민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4

시사점

직장·주거 문제 등으로 주소지를 옮긴 예비 출산가정이 전출·입 지자체의 출산장려금 지급기준과 맞지 않아, 두 지자체로부터 모두 지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직장 인사 발령, 분양 받은 아파트로 이사 등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거주기간 예외 인정을 검토하는 등 출산장려금 지원규정에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패척결을 향한 한국과 베트남의 동행



한국-베트남 반부패 MOU 연장체결

지난 2014년 한국과 베트남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이후 2015년 양국 간 교역액이 20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며, 앞으로 2020년까지 7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국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런데, 한국과 베트남이 경제관계를 맺기 전 이미 두 나라는 서로의 반부패 정책발전을 위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다. 글·편집실



오랜 인연의 끈을 이어가다

한국과 베트남 간 반부패 협력의 인연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베트남의 부패방지 중앙지도위원회(현 중앙내무위원회의 전신)는 한국의 반부패 정책과 기법을 배우고 상호협력을 확대하고자 한국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먼저 손을 내밀었다. 이에 양 기관은 2010년 2월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후 부패방지중앙지도위원회 사무처가 조직개편에 의해 중앙내무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MOU를 승계하였고 양 국가 간 협력 증진을 통한 부패 예방 및 척결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 2013년 MOU를 연장하였다.

2016년, 두 나라는 다시 한 번 반부패 MOU를 연장체결하며 오랜 인연을 이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지난 10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중앙내무위가 반부패 MOU 연장 체결식을 개최하였다.

MOU 연장 체결식에 앞서 성영훈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척결에 대한 베트남의 의지를 지지하고, 양국의 반부패·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중앙내무위원회와 지속 협력할 것”이라며 MOU 연장체결에 대한 기쁨을 표했다. 이어, 이날 참석한 판 안 투안 중앙내무위 부위원장은 “베트남에 한국의 경험을 공유해주길 바라며, 반부패 정책을 함께 마련하는 등 협력을 이루어나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협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다

MOU 체결 후 향후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국민권익위는 부패척결을 위해서는 공직자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청렴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존의 교육 방법에서 탈피한 획기적인 청렴교육 방법과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앙내무위는 국민권익위의 제안에 대해 동의하면서 OECD 뇌물방지협약, 민간부문 부패방지, 부패재산 환수 등 6개 분야를 2016~2018년 협력분야로 제시하였으며, 대형 부패사건의 처리 절차 등 사건 처리 경험을 공유해 줄 것을 희망하였다.

양 기관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표단 교류 및 직원 연수 등을 통한 직접적 교류 활동을 더욱 활발히 하여 협력을 강화하고, 온라인을 통해 자국의 반부패 정책 및 최근 반부패 활동 정보를 서로 교환하기로 했다. 또한, 국제회의에서 양 국가의 참석자를 통한 교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2017년 중에 국민권익위 대표단이 베트남을 방문하여 청렴교육 및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를 소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양 기관은 각 기관의 주요 반부패 정책과 활동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국민권익위는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 평가, 행동강령 제정·운영, 청탁금지법 등의 반부패정책과 국민신문고, 110 콜센터, 이동신문고 등의 고충민원 처리 정책, 행정심판 제도 및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현황 등 다양한 정책과 활동 성과를 소개했다. 중앙내무위는 미디어 매체를 통한 부패방지 교육 및 홍보 개시 현황,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체계 강화, UN반부패협약을 적용한 베트남의 부패방지법 보완 등 현재 진행 중인 활동 내용을 전달하였다.

이번 한국-베트남의 반부패 분야 MOU 연장 체결은 양 국가의 부패척결 의지를 다지고 향후 협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두 나라의 반부패 정책 및 현황 공유를 통해 서로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협력·실행방안을 마련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돈독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tip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CCIA, The Central Commission for Internal Affairs)는 2013년 2월 효과적인 반부패 업무 수행을 위해 기존 부패방지중앙지도위원회의 지위 및 기능강화를 목적으로 개정된 부패방지법에 의거해 설립되었다. 위원회는 부패방지법상 부패전담기구로, 부패방지 법규 및 제재 마련을 위한 연구, 반부패 관련 기구, 법원, 고충민원 및 부패 신고 처리 관련 기관의 활동에 대한 조사·감독·감사·조정, 총리 직속 기관장의 부패혐의 처리 관련 자문, 지방내무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감독·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행정심판의

행정상의 권리구제 장치 중 행정심판 제도만큼 큰 변화를 겪은 것은 없다. 1951년 구 소원법이 불과 14개 조문으로 제정된 이래 1985년 행정심판법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단 한 차례의 개정도 없이 유지된 반면, 현행 행정심판법은 열한 차례나 크고 작은 개정이 이루어지는 등 격동과 변화의 시기를 보냈다.

글 · 신봉기(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전과 미래



소원에서 행정심판으로, 그 차이는

소원법에 의하면 소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대상으로 하며, 그 취소나 변경(일부취소)을 청구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구두심문 없이 심사 재결토록 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인용률도 낮고 권리구제의 실효성도 변변치 않았다. 그런데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원을 반드시 거치도록 강제했기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를 경유할 수밖에 없었다. 권리구제절차이면서도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연시키는 절차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행정소송이 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했기에 소원은 실질적으로 1심 재판의 지위를 가지는 중요한 것이었다. 다행히 1985년 행정심판법은 43개의 조문을 가지는, 나름의 구색을 갖춘 법률로써 출범하였다.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과 부작위의 개념을 분명히 했고, 특히 의무이행심판을 도입한 것은 획기적인 것이었다. 사·도 행정심판위원회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2010년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명칭 변경)를 구분하여 관할권도 분명히 하고 청구기간도 연장하는 등 큰 변혁을 꾀함으로써 권리구제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현재 행정소송법이 1985년 법률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행정심판법은 많은 보완을 거쳐 61개의 조문에 이른다.

행정심판의 발전

행정심판법이 제정된 이후 동 제도는 큰 변혁을 겪었고 사건도 폭증했다. 특히 1998년 3월 행정소송의 제기예 앞서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했던 행정심판전치주의를 폐지하고 임의적 전치주의로 전환함에 따라 행정심판 제도의 존립에 대한 위기의식이 극도로 높아졌으나 오히려 그것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심기일전을 도모함으로써 보다 신속·공정한 심리·재결을 통해 권리구제의 확대를 가져왔고 접수 사건 수도 크게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2008년 법제처 소속이었던 국무총리행정심위는 신설된 국민권익위원회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이와 함께 종래 심리·의결기관에 그쳤던 행정심위(국무총리행정심위 및 사·도행정심위)가 심리·의결권 외에 재결권까지 가지게 됨으로써 신속성 확보는 물론이고 행정청으로부터의 독립성도 강화되었다. 2010년 국무총리행정심위는 지금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고, 타법에서 특별행정심판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심위와 협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기존의 집행정지 외에 임시처분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청구인의 권익구제를 도모하고자 했다. 한편 중앙행정심위의 경우 접수건수를 보면 1986년 331건이던 것이 1996년 3,991건으로 12배, 2004년 2만 여건으로 61배, 2010년에는 3만1천 건으로 94배를 넘겼고, 인용률은 18% 전후에 이르렀다. 사·도 행정심위의 경우 전국 평균 인용률은 1985~1995년 17.1%, 2000~2004년 34.8%, 2010~2014년 34.1%에 이른다. 현행 행정심판 제도에 있어 그동안 여러 쟁점이 부각된 바 있다. 예컨대, '재판의 전심

절차'인 현행 행정심판제도가 헌법 제107조 제3항 소정의 '사법절차가 존용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당사자심판·예방적 금지심판의 적극적 도입과 의무이행심판의 보완 필요성, 청구인적격에 있어 '법률상 이익'을 '법적 이익'으로 수정하고 또 집행정지 및 임시처분 외에 민사소송법 수준의 가처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행정소송법 개정안과 보조를 맞출 필요성, 화해권고결정이나 집행력 확보를 위한 간접강제 등의 도입 필요성 등을 들 수 있다.

행정심판제도의 미래,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

앞에서 언급한 여러 쟁점 외에 필자는 다음의 세 가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특별행정심판제도의 조직법적 개선이다. 일반행정심판을 다루는 중앙행정심위와 제각기 중요한 비중을 갖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조세심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통합 문제로 하고, 현재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특별행정심판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제까지는 주로 국무총리행정심위·중앙행정심위 중심의 제도 개선에 치중해 왔으나 앞으로는 사·도행정심위 제도의 개선에도 보다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사·도행정심위의 경우 아직도 여전히 단체장(사·도지사)이 재결청인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까지 한다. 사·도지사가 재결청으로 인식되게 되면 사·도나 그 산하기관이 관련된 행정심판 사건에서의 공정성·중립성에 의심을 받을 우려가 있다. 또한 사·도의 경우 위원장은 직무대행이 맡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이는 위원장이 직무대행을 사전에 지명하고 있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행정심판법상 위원장은 '그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으로서 사·도지사가 되기 때문에 직무대행을 지명하더라도 이를 행정부지사가 맡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도가 의외로 적지 않다. 행정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행정심판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당해 사·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즉 민간인위원을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된다(동법 제7조 제3항). 셋째, 지방행정심위의 경우에 아무래도 지역적 온정주의의 여지나 재심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가 없지 않은바, 행정심판에 있어서도 지방행정심위와 중앙행정심위 간의 심급제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중앙노동위, 지방토지수용위·중앙토지수용위 등의 시스템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몇 가지 제언에 대하여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중앙행정심위와 지방행정심위를 두루 경험한 필자의 고언이 깊이 고려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독자에세이 ▲

마음까지 보듬어준 당신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모두가 갖는 것이 국방의 의무라고 하지요?
젊은 날의 소중한 시간을 나라를 위해 바쳤지만 군복무 중 생긴 병으로
고통을 받으며 힘겨운 나날을 보내야 했던 어느 민원인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민원인이 국민권익위로 보내온 편지와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조 조사관님께

안녕하세요. 늘 수고 많으십니다.

국민들의 억울한 심정을 헤아리고, 해결하기 위해 바쁜 매일을 보내시느라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 생각되어 이렇게 편지를 띄웁니다.

육군항공부대에서 복무하며 헬기에 항공유 주유 및 유류탱크 청소 등의 업무를 하던 저에게 피부염이 생겼던 것이 긴 싸움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차례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크게 차도가 있어 보이지 않아 전역 후에도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었죠.

그리고 한 대학병원에서 '균상식육종(혈액암)'을 진단 받았습니다.

군복무로 인한 병이라는 걸 알았을 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수천 번 생각해봤지만 억울한 마음만 커졌습니다. 고민 끝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지만 인정이 되지 않더군요.

변호사를 만나보기도 하고 신문고 등 여러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희귀성 질환이다 보니 이해를 구하기도, 동의를 구하기도 어려웠을 뿐더러 계속 되는 유공자 재판 실패에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중 국민권익위원회를 알게 되었고, 오형조 조사관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형조 조사관님은 저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움의 말씀주시고 자신의 일처럼 돌보아 주시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도움 끝에 당해 8월 30일 국가유공자 3급에 등록되었죠.

저는 그 날을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11년간의 앞이 보이지 않는 긴 싸움에 큰 도움과 기둥이 되어주신 오형조 조사관님을 뵈고 인사드리려고 했으나 한사코 본인 일을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본인 일처럼 기뻐해 주신 말씀에 더욱 드림 말씀 없이 감사하였습니다.

모든 공직자 분이 이렇게 하시기도 어려운 일이란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더욱더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리며 부디 이런 공직자가 대한민국에 더 많이 계시길 희망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드림



작은 비리도 법망을 피해갈 수 없는 청렴한 나라 호주 호주 부패방지위원회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호주. 이 나라는 깨끗한 자연환경만큼이나 공직자들의 업무 수행도 아주 청렴하다고 이름나 있다. 국민의 신뢰는 공직자들의 청렴에서부터 시작됨을 깨닫고 부정부패와 싸워나간 호주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글·편집실



공직자에게 엄격한 청렴의 잣대

지난 2005년 호주 시드니의 한 시의원이 '거대' 뇌물수수로 사임한 사건이 있었다. 개발업자에게 현금으로 약 2,500달러를 받은 장면이 만천하에 공개된 것이다.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반부패위원회는 여러 차례의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사건을 집중 조사하였고, 시의원은 결국 뇌물 수수를 시인하며 자진 사퇴의 길을 택했다. 당시 환율로 2,500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0만원. 혹자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부정부패가 세계 곳곳에서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운도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정치 기부금 문화가 제도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어 단돈 1달러도 엄연한 뇌물인 호주의 정치문화 정서상 2,500달러는 유력지에 대서특필될 정도로 아주 큰 부정 스캔들이다.

공직자들에게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부패방지법'이 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주정부는 뇌물수수와 관련된 시의원이나 시장을 최대 5년 동안 면직 조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혐의 없음으로 판결이 나더라도 면직 처분할 수 있다. 더욱이 부정행위 감시 대상이 시의원에 머물지 않고, 시의회나 시행정부에서 부정부패 행위가 발각되는 경우에는 관련자 전원을 면직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호주는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등록에 대해서도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고위공직자 본인과 직계가족, 배우자의 재산등록은 물론, 업무와 이해관계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각종 소득, 부동산, 주식 등은 물론 사기업이나 기관과의 모든 종류의 협약관계, 자원봉사활동 등을 포함한다. 특히 공직자 본인의 경우 사적·공적 관계를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인적 관계까지 등록해야 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인맥'도 재산으로 간주하여, 이 인맥을 통해 저지를 수 있는 잠재적 부정부패까지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재산등록이 누락됐을 경우에는 업무를 제한하거나 사직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부패척결을 위한 모든 것, 반부패위원회

국제투명성기구의 세계부패인식지수조사에서 매년 10위권 대 순위에 오르는 호주는 연방기구 법집행청렴원을 비롯하여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반부패위원회, 퀸즈랜드 주의 범죄부정위원회,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의 부패방지위원회, 빅토리아 주의 부패방지위원회,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주의 부패범죄위원회, 태즈메니아 주의 청렴위원회 등의 반부패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이 기관들은 관계자 소환, 정보·자료 제출 요구, 수색영장 집행, 청문회 개최, 감청 등 강력한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그 중 뉴사우스웨일즈 반부패위원회(ICAC,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를 중심으로 호주의 반부패 제도를 설명하고자 한다. 반부패위원회는 청



뉴사우스웨일즈 반부패위원회(ICAC,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문화 증진 소환권, 압수수색권, 감청 및 감청장치 설치, 청문회 개최, 부패방지 교육 및 제도개선 권고 등 반부패 예방 활동 및 부패사건 처리 등 반부패에 관한 전반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반부패위원회는 1980년대 후반 노동당 집권 당시 뉴사우스웨일즈 주 공직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패행위로 인한 국민들의 불신과 극심한 비난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주로 교정기관의 장이 뇌물을 받고 죄수를 방면하거나, 판사가 뇌물을 받고 재판에서 부당한 판결을 내리는 부패행위가 일어났으며, 경찰·교통부·보건부 공무원들이 금품수수의 대가로 사립탐정과 민간회사에 정보를 파는 등의 비밀정보 교환도 호주에서 벌어지는 흔한 비리범죄였다.

이러한 암적 행위가 지속되던 1988년, 당시 야당이던 자유당이 부정부패를 청산하자는 분위기 속에서 집권에 성공하여 부패방지법(The ICAC Act)을 제정하였고, 1989년 3월 반부패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출범 초기 치안판사, 주 정부장관의 구속 및 경찰청 부청장 파면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조사에 중점을 두었으며 뉴사우스웨일즈 주 내 정치, 사법,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였고 국민들의 신뢰를 점차 회복하게 되었다.

Australia



ICAC 메간 라담 위원장. 공공부문 윤리와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발표

ICAC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짜임새 있는 조직이 만들어가는 청렴

반부패위원회는 조사국, 법무국, 부패예방교육연구국, 행정지원국 등 4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국은 반부패위원회로 들어온 신고상담과 우편, 전화 등으로 제보되는 모든 내용을 1차로 심사하여 범죄평가위원회에 보고한다. 범죄평가위원회는 이 보고를 바탕으로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사안의 중요도 및 구조적 부패 가능성에 따라 위원회가 직접 조사할지를 결정한다. 반부패위원회의 인력과 재원의 한계로 인해 보통은 사안별로 해당부서나 관련 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회에서 요구한 사안은 반드시 반부패위원회에서 자체 조사를 진행한 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위원회는 자료제출, 현장조사, 영장청구, 감청 등의 법령상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들 권한을 행사할 때는 법무국 변호사의 자문을 거치고, 영장청구와 감청 등의 권한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 행사한다. 특히 공개 및 비공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 이는 부패행위의 조사과정으로 범죄사실을 추궁하여 증언 및 범죄 단서를 확보하는 강력한 권한이다. 위원회는 부패혐의가 있다고 인정될만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증인 등을 청문회에 회부할 수 있고,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강제진술 청구권이 부여된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발부하는 체포영장을 통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청문회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라도 이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일반법정에서

66

부정부패가 만연한 세상에서는 국가의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활용되지 못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국민들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청렴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는 호주의 사례를 돌아보며, 청렴 대한민국으로 더 가까이 다가서고자 한다.

99

이러한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법의 균형과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이지만 이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반부패위원회는 부패예방 및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이를 관장하는 부서는 부패예방교육연구국이다. 부패예방교육은 기관에 중점을 두어 각 정부기관별로 부패 유형, 취약요인 등 특성을 감안한 교육을 실시한다. 일반국민과 지역사회에도 교육을 실시하는데,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반부패위원회의 업무 소개 및 부패방지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들로 하여금 부패방지에 대한 책임 의식을 깨우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다.

명심보감 성심편 장원시에서 이르기를 '나라가 바르면 하늘의 마음이 순하고, 관리가 깨끗하면 백성이 스스로 편안하다'라고 하였다. 부정부패가 만연한 세상에서는 국가의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활용되지 못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국민들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청렴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는 호주의 사례를 돌아보며, 청렴 대한민국으로 더 가까이 다가서고자 한다.

종이컵에 담긴 빨간 추억 1인분 떡볶이

국민간식 떡볶이가 세계인의 간식으로 거듭났다. 우리들 추억 속의 컵 떡볶이에서 출발하여 화려한 프랜차이즈 떡볶이들이 관광객과 사람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짜장, 치즈, 퓨전까지 다양한 형태로 진화한 떡볶이를 보노라면 어린 시절 즐겨먹던 빨간 떡볶이가 그리워진다. 그 시절 우리가 기억하는 떡볶이는 어떤 모습일까.



퇴근 길, 출출한 배를 채우려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달큰한 떡볶이 1인분이면 기분 좋게 배가 불러 올 것 같았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라곤 즐비한 프랜차이즈 떡볶이 가게 뿐. 그 많던 길거리 떡볶이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 어렸을 적, 방과 후 집으로 가는 길엔 항상 떡볶이를 파는 용달차가 있었다. 그땐 단돈 '몇백 원'만 있으면 긴 종이컵에 가득 담긴 떡볶이를 사 먹을 수 있었다. 그렇게 컵 떡볶이를 손에 쥐고 꼬챙이로 하나씩 집어 먹을 때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곤 했다. 나이가 든 지금도 떡볶이는 여전히 사랑하는 음식 중 하나다. 단지 어릴 때 비닐 씌운 접시에 떡볶이를 담아내던 동네 분식집이나 용달차들이 많이 사라진 것이 아쉬울 뿐이다. 현대의 떡볶이는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다. 혀의 감각을 마비시킬 정도로 매운 떡볶이부터 치즈, 짜장, 여러 식재료를 가미한 퓨전떡볶이까지. 게다가 떡볶이는 분식점뿐만 아니라 고급 레스토랑이나 카페

에도 등장하는 추세다. 그렇다면 최초의 떡볶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현재 즐겨먹는 고추장 떡볶이는 한국전쟁 직후에 개발된 음식이다. 이전에 궁중에서 먹던 떡볶이는 간장 양념에 재워둔 쇠고기를 떡과 같이 볶아서 만들었다고 한다. 조선 말기에 편찬된 조리서 '시의전서(是議全書)'에서는 궁중떡볶이 조리법에 관해 '다른 찜과 같은 방법으로 조리하고 흰떡을 탕무처럼 썰어 잠깐 볶는다. 다른 찜과 같은 재료가 모두 들어가지만 가루즙은 넣지 않는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또한 한글 필사본 조리서, '주식시의(酒食是儀)'에서는 떡을 잘라 기름을 많이 두르고, 쇠고기를 가늘게 썬 것과 함께 넣어 볶는다고 나와 있다. 현재의 고추장 떡볶이는 1953년에 마복림 씨가 광희문 밖 개천을 복개한 서울 신당동 공터에서 길거리식당 음식으로 팔던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중국음식점에서 가래떡을 실수로 짜장

면 그릇에 떨어뜨렸는데 그 떡을 먹고 보니 맛이 좋아서 고추장떡볶이를 생각하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연탄불 위에 고추장, 춘장을 섞은 양념으로 만들었다. 이후 1970년대 MBC 라디오 <임국희의 여성살롱>이란 프로그램에서 신당동 떡볶이 골목이 소개되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

수많은 프랜차이즈점이 생기고, 갈수록 그 가맹점은 증가일로에 있다. 화려한 떡볶이의 자태에 사람들은 너나할 것 없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포스팅하기 바쁘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여전히 떡볶이는 길거리 용달차나, 허름한 분식집에서 먹는 것이 가장 맛있다. 짝짝 늘어나는 치즈도 없고, 분위기도 없지만 그곳엔 추억이라는 조미료가 듬뿍 담겨 있기 때문이다.

떡볶이, 기름을 입다! 기름 떡볶이



국물 떡볶이가 어린 시절 추억을 저격했다면, 기름 떡볶이는 어른이 된 우리에게 깔끔하고 맛있는 간식으로, 또 맥주 안주로 취향을 저격한다. 퇴근 후 지친 우리를 달래줄 바삭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 기름 떡볶이를 만들어보자.

재료(2인 기준)

판 어묵(2장), 떡볶이 떡(2컵), 쪽파(3대), 간장(0.5), 참기름(0.5), 양념장 - 고운 고춧가루(0.5)+간장(0.7)+고추장(1)+물엿(2)+참기름(0.7)+후춧가루(약간)

양념: 다진 마늘(0.5), 다진 파(2), 참깨(0.5)

조리과정

1. 양념장은 고루 섞고 어묵과 쪽파는 떡볶이 떡 크기로 썬다.
2. 떡볶이 떡은 끓는 물에 30초간 데쳐 찬물에 살짝 헹구 물기를 뺀 뒤 떡 밀간에 버무린다. Tip. 단단하게 얼어 있는 떡은 데치기 전 해동하거나 말랑말랑할 때까지 더 데친다.
3.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약한 불로 달군 뒤 다진 마늘과 다진 파를 넣고 타지 않게 볶는다.
4. 향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떡과 어묵을 넣어 중약 불로 2분정도 볶는다.
5. 센 불로 올려 양념장을 넣고 떡과 어묵이 양념이 잘 버무러지도록 1분 정도 볶다가 쪽파를 넣고 30초간 더 볶은 뒤 참깨를 뿌려 마무리한다.

한겨울에 핀 성곽건축의 꽃

경기도 수원 화성

수원은 떠나고 싶을 때 훌쩍 떠나기 좋은 곳이다. 날씨가 춥다면 더욱 그렇다. 특히 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역주민의 고충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0월19일 '정부3.0 이동신문고'를 운영한 인연이 있는 지역이다. 정조가 꿈꿨던 새로운 시대, 변혁과 개혁의 중심이었던 수원 화성으로 떠나본다.

글+사진 • 임운석(여행작가)

수원 도심에 자리한 화성은 동서양의 축성방식이 결합된 실용성 높은 성곽이다.

완벽한 준비와 효성으로 지어진 화성

수원 도심에 자리한 화성은 동서양의 축성방식이 결합된 실용성 높은 성곽이다. 팔달산을 중심으로 5.7km에 걸쳐 미려한 곡선미를 자랑한다. 총면적은 국제공인축구장 150개 이상을 지을 수 있는 1.3km² 넓이로서 상당한 규모다. 행궁이 있는 서쪽 성곽은 팔달산에 걸쳐 있어 산성처럼 지어졌고 동쪽은 평지에 지어졌다.

화성의 축성 배경은 여느 성과 다르다. 임금의 지극한 효심에 의해서 축성되었기 때문이다. 정조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인 사도세자가 당쟁의 희생양으로 뒤주에 갇혀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정조에게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이요, 상처였다. 그 맺힌 한을 풀어내기 위해 정조는 왕에 오른 뒤 13년 만에 사도세자의 능침을 양주 배봉산에서 수원 화산으로 옮겼

다. 그리고 화산 인근에 있던 읍치를 수원 팔달산 아래 지금의 위치로 이전시키면서 화성 축성이 본격화 되었다. 1794년 터를 닦기 시작한 뒤 불과 2년 반 후인 1796년에 완공하였다. 놀라운 사실은 1795년에는 유난히 추위 얼음이 녹을 때까지 축성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하니 실제로 완공까지 소요된 기간은 더 짧은 셈이다. 이처럼 빠른 시일 내에 가능했던 이유는 공사 시작 4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한 덕분이었다. 또한 건축기술의 발달과 거중기를 비롯한 최신장비의 사용도 빼놓을 수 없다. 화성은 축성기간이 짧았지만 우리나라 성곽을 대표할 만큼 아름답게 지어졌다. 전통적인 성곽의 모습에 일정한 크기의 돌과 벽돌을 사용하여 서양성곽의 아름다움까지 더했다. 화성은 공격과 방어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 있어 실용성까지 더한 최고의 걸작이다.





01

01 수원천 위에 세워진 화홍문의 편액
02 화성행궁 신평루 앞에서 진행되는 무예24기 공연모습
03 정조가 휴식을 취했던 경룡관



03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전란으로 인해 성은 허물어졌고 축성 당시의 아름다운 모습은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유는 <화성성역의궤>에 의해 완벽에 가깝도록 복원되었기 때문이다. <화성성역의궤>는 도면은 물론, 공사일정, 관계자 명단, 비용 내역 등 축성에 관한 모든 내용들이 정확하게 기록된 보고서다. 화성여행 중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행궁이다. 행궁은 임금의 능행이나 휴양 때 임시거처로 사용하던 것으로 전란 때는 피난처로 이용되기도 했다. 화성행궁은 화성이 축성될 때 함께 건축된 건물로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이 있는 화산으로 능행차를 할 때마다 사용한 거처였다. 팔달산 기슭에 자리한 행궁은 657칸 규모로 지어져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1시간부터 반나절까지 두 발로 성곽을 따라

화성과 행궁을 돌아보려면 시간과 동선을 잘 짜야 한다. 1시간 정도 돌아볼 계획이라면 먼저 행궁을 추천한다. 행궁 앞에 세워진 누문은 신평루다. 원래 현판에는 진남루라 적혔었는데 1795년 정조가 '신평루'로 고쳐 지금에 이른다. 신평이란 화성이 정조에게 '고향과 같은 곳'임을 뜻한다. 이어 좌익문이 나오고 중앙문을 지나 봉수당에 닿는다. 봉수당은 화성 행궁의 정전으로서 임금이 머무는 곳이다. 이곳에서 정조가 혜경궁의 회갑연인 진찬례를 거행하였다. 내부에는 당시 상황을 재현한 밀랍인형이 설치되어 있다. 정교하게 제작되어 진짜 사람으로 착각할 정도다. 장락당은 혜경궁의 침전으로 사용한 곳이다. 어머니의 만수무강을 비는 마음으로 장락당 편액을 직접 써서 걸었다 하여 많은 관람객들이 빼놓지 않고 찾는다. 행궁은 외국인 관광

객들에게도 인기가 있다. 드라마 '대장금'의 촬영지로 알려져서다. 행궁 관람이 끝났다면 팔달산으로 향하는 숲길을 따라 서장대에 올라보자. 서장대는 화성에서 가장 높은 팔달산에 위치한 장대로서 성곽 일대를 한눈에 바라보며 군사를 지휘하던 곳이다. 정조는 서장대 편액인 '화성장대'를 직접 썼으며 이곳에서 주야로 군사훈련을 지휘하기도 했다. 서장대 서쪽에는 화성의 4대문 중 하나인 화서문이 위용을 뽐낸다. 복원된 것이 아니라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성문을 감싼 반원의 웅성과 서북공심돈에 사용된 벽돌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웅성 안 홍예문 좌측석벽에는 성문공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의 이름까지 새겨져 있어 당시에도 책임시공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어 화성의 정문인 장안문과 수원전을 잇는 수문인 화홍문에 이른다. 화홍문은 여름에 더위를 피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수원천이 퐁퐁 얼어붙는 한겨울에는 얼음썰매를 타는 동네아이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서장대를 시작으로 화서문~장안문~방화수류정~창룡문~팔달문을 돌아보고 다시 서장대까지 돌아보는 원주코스는 서너 시간을 할애해야 가능하다. 시간이 부족한 경우 화성열차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운행구간은 연무대를 시작으로 화홍문~화서문~팔달문~화성행궁~팔달문 전통시장~수원화성박물관을 거쳐 연무대로 돌아온다.

화성의 아기자기한 모습들

밖에서 긴 시간을 보냈다면 따뜻한 갤러리를 돌아보며 몸을 녹여보자. 행궁과 가까운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과 수원화성박물관 등이 대표적이다. 상설전시와 기획전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 문화를 향유하기에 으뜸 코스다. 오랜 역사만큼이나 화성 주변에는 사람이 뽑어내는 생기가 가득하다. 행궁동 벽화마을은 골목이 매력적이다. 골목은 아기자기한 벽화가 그려진 벽화마을,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공방거리, 시골벽적한 재래시장 등으로 실핏줄처럼 이어진다. 쌀쌀한 날씨에 든든한 먹거리가 그림다면 팔달문이나 지동시장 주변을 찾아보면 좋다. 통닭 튀기는 냄새가 발목을 붙잡는 통닭거리도 빼놓으면 섭섭하다. 바삭바삭한 튀김옷에 부드러운 속살을 숨기고 있는 통닭은 자연스럽게 식욕을 당긴다.

추운 날씨 탓에 집안이 발목을 단단히 잡고 놓아주려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추위에 굴복하고 실내에만 있기엔 겨울만의 풍경이 무척이나 아름답다. 옷을 단단히 여미고 수원 화성으로 발길을 향해보자. 수원 화성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먹거리가 여행자들에게 또 하나의 겨울 추억을 선물해줄 것이다.

04 수원화성박물관에 전시된 수원자작거리모형
05 양념맛이 일품인 통닭거리의 양념통닭
06 행궁동 벽화마을의 벽화



04



05



06

유리병에 담은 나만의 작은 정원

메마른 도시에서 작고 독특한 실내 정원으로 오아시스 역할을 해주는 테라리움이 주목받고 있다. 바쁜 생활 탓에 화분에 물주는 일을 자주 깜빡하는 사람, 나만의 정원을 갖고 싶지만 가드닝이 처음인 사람들이라면 테라리움은 어떨까?

글· 편집실



테라리움, 나의 친구가 된 자연

현대인들에게 '반려식물'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식물을 단순히 관상의 의미를 넘어, 애정을 쏟는 '반려(伴侶)'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그 중 '테라리움(Terrarium)'은 관리가 쉬운데다 인테리어 효과는 물론 미세먼지와 실내 공기오염도 정화해줘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테라리움은 라틴어의 'Terro(땅)'와 'Arium(용기·방)'의 합성어로, 유리용기 속에 흙과 장식 소품을 넣어 함께 식물을 가꾸는 것을 뜻한다. 바쁜 생활 탓에 화분에 물주는 일조차 깜빡하는 현대인들에게 자생 가능한 테라리움은 반려식물로 안성맞춤이다. 스스로 잘 자라는 식물이라 할지라도 종류에 따라 관리법은 조금씩 달라진다. 먼저, 테라리움은 용기의 뚜껑 여부에 따라 밀폐식과 개방식으로 나뉜다. 밀폐식의 경우 내부의 습도가 높아 습기에 강한 식물을 심는 것이 좋다. 너무 습할 경우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한다. 주로 가정에서 키우는 개방식 테라리움의 경우는 주기별로 물을 주면 되는데, 흙이 검은 빛을 띠거나 살짝 마졌을 때 건조하다 싶으면 가장자리부터 천천히 물을 주면 된다.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관리를 잘한다면 나만의 작은 정원을 오랫동안 지켜볼 수 있다. 영국의 한 남성의 사례에서는 1972년 밀봉한 테라리움이 2013년까지 싱싱하게 살아 있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올 겨울 함께 보낼 테라리움 고르기

테라리움의 종류는 무궁무진하다 할 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면 되기 때문이다. 만드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 색색의 자갈이나 모래를 사용해 화려하게 꾸밀 수도 있고, 마치 자연의 숲속을 일부 떼어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 성공적인 테라리움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절한 식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물이 유리용기 속에서 광합성을 통해 신선한 공기를 만들어 내고, 증발된 수분은 다시 흙으로 흡수되는 순환작용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테라리움 식물로는 공기정화 식물로 유명한 '틸란드시아'가 있다. 일명 '먼지 먹는 식물'이다. 틸란드시아는 공기 중에 있는 수분과 먼지 속 미립자를 영양분으로 삼아 자란다. 심지어 흙에 심지 않아도 직사광선에 유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놓아두면 특별한 관리 없이도 잘 자란다. 겨울철에는 실내 공기가 탁하기 때문에 '스투키'도 좋다. 스투키는 공기 정화 능력이 뛰어나고 전자파 차단 효과도 있어 아이들 방이나 사무실에 두기 좋다. 해가 들지 않아도 잘 자라고 물은 한 달에 한 번만 주면 된다. 실내 분위기를 살리기에는 '시클라멘'이나 '백묘국'도 좋다. 시클라멘은 겨울에 꽃을 피우며, 공기 정화 기능도 뛰어나다. 따뜻한 곳에 두면 꽃이 시드니 베란다나 현관 등 해가 안 들고 서늘한 곳에 두어 관리하면 된다. 백묘국은 설국이라고도 불리는데 국화의 옆에 마치 하얀 눈이 덮인 모양을 하고 있어 붙여진 별칭이다. 겨울 느낌을 물씬 풍겨 크리스마스 장식으로도 활용하기 좋으며,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꼭 실내에 두어야 한다.



Terrarium

tip 밀폐형 테라리움 만들기

1. 적당한 식물을 선택했다면, 마음에 드는 용기 맨 아래에 자갈을 3cm 두께로 깎다. (자갈은 물을 저장하는 배수층 역할을 한다.)
2. 자갈 위에 수분조절과 살균에 도움이 되는 원예용 숯을 1.5cm 정도 넣는다.
3. 식물을 심고 흙을 덮는다. 원예용 배양토나 소독한 흙을 식물의 뿌리를 충분히 덮을 정도로 넣는다.
4. 흙을 살짝 적실 정도의 물을 준 후 뚜껑을 덮으면 밀폐형 테라리움이 완성된다.

※ 병 속의 공기가 습하거나, 물방울이 맺혀 내부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 뚜껑을 열어 물기를 날려준다. 처음 며칠 동안만 잘 관리하면 이후에는 잘 자라게 된다.

아르바이트 노동자도 당당하게 권리를 외치자!

아르바이트 노동자 권리침해 사례와 구제 방안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고스란히 당하는 경우를 뉴스를 통해 심심찮게 접하곤 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약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을 알면 힘이 생기는 법!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권리침해 사례를 통해 구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 국민권익위 공익법무관



사례 1



패스트푸드점 A사에서 알바생으로 일하는 김권익(24세, 남) 씨는 시급 5,000원을 받으면서 일주일 내내 하루 8시간을 꼬박 업무에 매달린다. 점심 시간을 제외하고는 따로 휴식시간도 없고 가끔 일이 많을 때는 초과근무를 하기도 하지만, 사장님은 별다른 조치 없이 '고생했다'라는 말만 한다. 뭔가 부당해 보이지만 어디에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참고 있다. 김권익 씨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사례 2



박친절(23, 여) 씨는 아르바이트 도중 깜짝 놀란 적이 있다. 사장님이 대뜸 '넌 허리 라인이 참 예쁘다'라는 말을 하며 옆구리와 가슴 쪽 부위를 손바닥으로 쓰다듬는 것이었다. 그 외에도 '얼굴도 예쁘데 일도 잘 하네'라는 말을 하며 팔뚝을 주무르거나 허리를 끌어안는 등 불쾌한 일이 몇 차례 있었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그냥 넘어간 적이 있다. 박친절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의 조언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시급

2016년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월환산액 126만 270원)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따라서 김권익 씨는 최저임금액인 6,030원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이를 알바생이 요구하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이 있으므로,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때 유의해야 할 것이,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근로기준법 제49조) 급여를 받지 못한 때로부터 3년 내에 청구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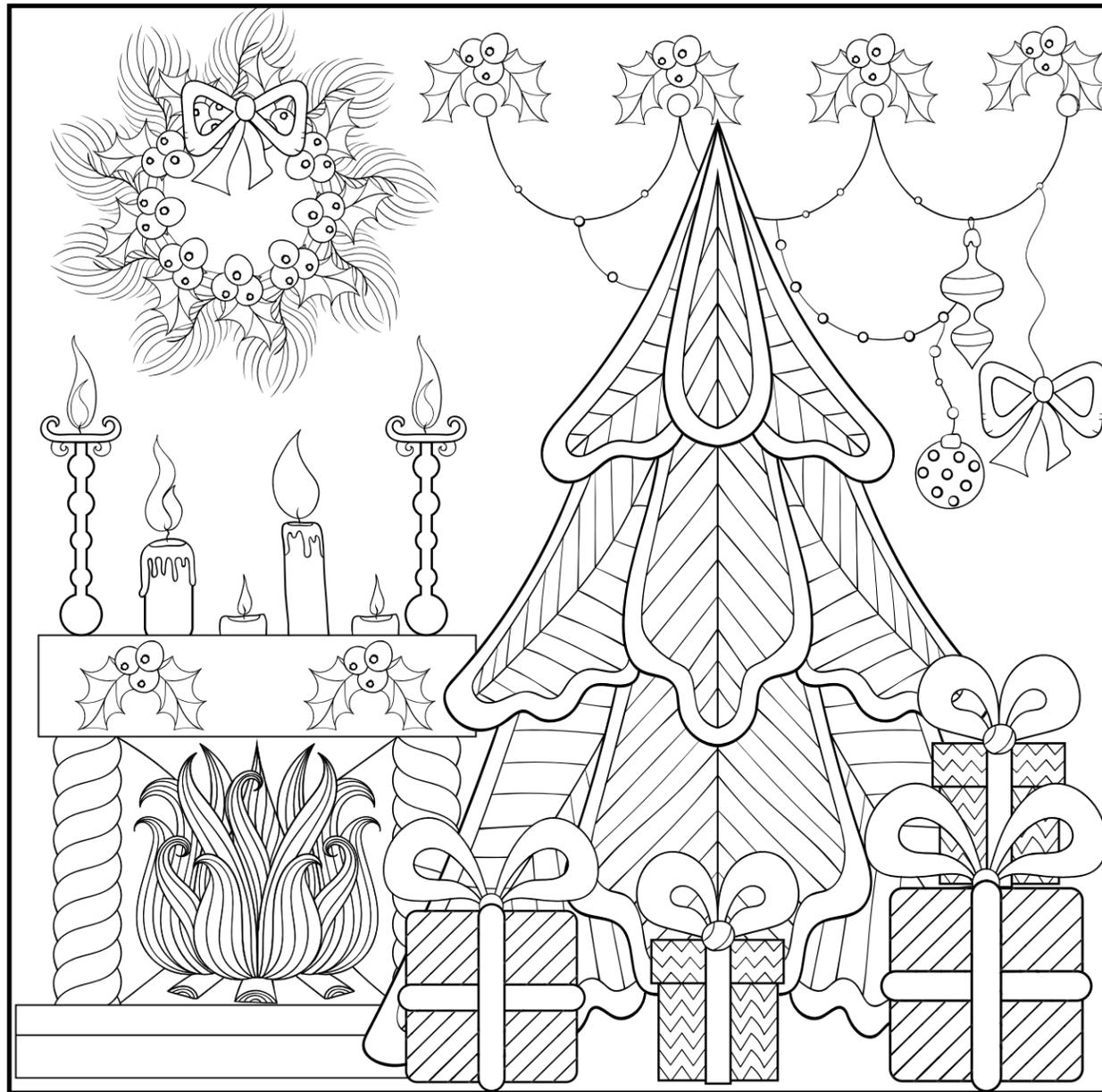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근무환경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보장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 또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1주 12시간이 한도이고, 연장근로 부분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53조 제1항). 따라서 이 부분 역시 김권익 씨가 법적 절차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겠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이때 업무관련성은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방해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에도 넓게 인정됩니다. 박친절 씨가 경험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형법상 강제추행죄에도 해당합니다(형법 제298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이 경우 박친절 씨의 사업주는 강제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민·형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실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증명자료로는 사업장 내 CCTV 영상, 사업주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녹음자가 대화에 포함된 경우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등이 있으며, 증인들의 증언도 증명자료로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힐링 컬러링 

나만의 겨울 풍경을 만들어 주세요!

〈국민권익〉 독자들을 위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아트테라피 공간.

다양한 컬러로 개성 있는 자신만의 페이지를 만들어 보세요.

예쁘게 채색 후 모두에게 자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사진을 찍어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때 성함, 주소, 연락처도 잊지 말아주세요! 보내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 보낼 곳: ckh08@korea.kr (기한: 12월 30일까지)

<힐링 컬러링 당첨자>

장*숙 (eogus0***@naver.com)

윤*식 (ys340***@daum.net)

이*안 (kiani1***@hanmail.net)

선*은 (yesun1***@hanmail.net)

조*미 (yjc***@hanmail.net)

이*석 (u-t***@daum.net)



장*숙



윤*식



이*안



선*은



조*미



이*석



Healing
Coloring

다가오는 연말,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면?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지금, 연초의 계획들을 꺼내본다. 뿌듯함과 함께 아쉬움도 들겠지만, 내일을 위해 쉬어가는 시간을 갖자. 이를 위해 문화생활 안내를 준비했다. 특별한 전시와 남달랐던 이들의 생각을 함께 만나보자. 글·편집실

Exhibition



미술관, 예술의 생애를 되짚어보다

<달은, 차고, 이지러진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 2017. 2. 12까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달은, 차고, 이지러진다>가 전시중이다. 이번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의 과천 이전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주요 소장품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 전시는 주기적으로 차고 기울기를 반복하는 달과 같이 '작품'을 하나의 생명주기를 가진 생명체로 보고 마치 달을 탐사하듯 예술의 기원과 해석, 생애와 운명의 비밀을 좇아가는 경로를 보여주고자 기획되었다. '해석', '순환', '발견'이라는 세 개의 주제를 통해 작품이 탄생하는 시대적 배경, 제작, 유통, 소장, 활용, 보존, 소멸, 재탄생의 생명주기와 작품의 운명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이는 작품을 중심축에 두고 작가, 관람객, 미술제도, 미술사의 광범위한 상호작용 속에서 예술의 전 과정을 성찰해 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다. 본 전시와 함께 개별 프로젝트도 만나볼 수 있다. 아카이브 프로젝트 '기억의 공존'은 국립현대미술관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고, 공간변형 프로젝트 '상상의 항해'는 미술관 건축의 생애와 지속, 변형 가능성을 탐구하면서 장소의 의미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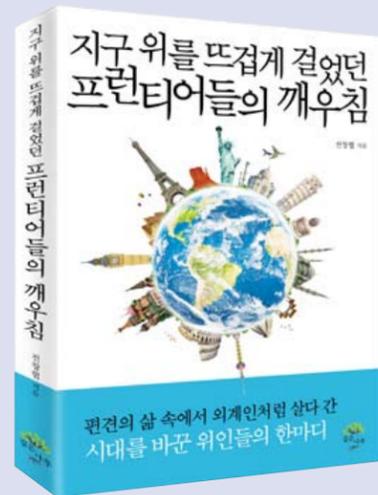


Book

시대를 이끈 개척자들의 말

<지구 위를 뜨겁게 걸었던 프런티어들의 깨우침> (전창협 / 깊은나무)

시대를 앞선 사람들은 종종 기성세대와 권력층에게 외계인 취급을 받는다. 이는 곧, 기성세대가 가진 권력과 힘을 위협하는 인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대를 앞선 사람들의 행동과 말은 후세대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한다. <지구 위를 뜨겁게 걸었던 프런티어들의 깨우침>은 한 걸음 앞서갔던 세계 유명 인사들의 인생을 바꾸고, 세계를 변하게 한 결정적인 말 한마디를 알게 한다. 책은 1부 여성 편과 2부 남성 편으로 구성돼 있다. 책에 나오는 인물의 시대가 남녀평등 시대가 아니었음을 생각해보면, 1부에 등장하는 14명의 여성들이 위대한 개척자들임을 알 수 있다. 불평등의 역사 속에서 뛰어난 능력이 있음에도 남성에 비해 인정받지 못하거나 아주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겨우 그 능력을 인정받은 여성들. 그렇기에 그들의 말은 더욱 가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작가는 여러 인물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깨달아 전하는 말을 한 권으로 갈무리했다. 책에 담긴 '프런티어'들의 말을 하나씩 읽다보면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시대를 개척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우리는 국민권익위원회 히어로!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그림. 미스안

고충처리

국민의 고충 해결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날아가지!

국민의 최종 고충민원 처리기관으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조사하고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 고충민원 처리
- 이동신문고 운영
- 기업고충 해결
- 현장조정

제도개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제도! 내가 고쳐주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공식사회의 부패를 유발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습니다.

- 불합리한 제도
- 잘못된 관행

행정심판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으로 잘못된 처분을 바로 잡는다!

인허가,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운전면허 취소 정지 등과 관련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침해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합니다.

- 신속하고
- 공정하게!

부패방지

부패를 근절하여 신뢰받는 공식사회를 구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임무!

청렴도 측정, 부패공익신고 처리, 신고자 보호보상, 청렴교육 등을 통해 청렴한 공식사회 구현에 앞장섭니다.

- 행동강령 위반행위
- 공익침해 행위
- 부패행위
-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청탁금지법 시행

부정청탁, 금품수수 더 이상 못 참아! 청탁금지법 시행은 청렴 대한민국으로의 새로운 시작!

부정청탁이 통하지 않는 문화, 금품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 사회, 신뢰받는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 아랍!
- 부정청탁
- 금품수수

국민권익위원회 / www.acrc.go.kr
 상담 국민없이 110 / www.110.go.kr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국민생각함 / idea.epeople.go.kr
 온라인행정심판 / www.simpan.go.kr



NEWS 1

하남시 현장간담회, 이동신문고 운영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9월 30일 하남시청을 찾아 하남시 주요 현안사항 청취를 위한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과의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주민들의 고충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3.0 이동신문고'를 운영하였다. 국민권익위의 분야별 전문조사관과 민간 협력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의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하였다.



NEWS 2

나이지리아 대통령반부패자문단에 반부패 정책 소개

지난 11월 1일 나이지리아 대통령반부패자문위원회(PACAC) 대표단이 한국의 성공적 반부패 정책 및 사례 연구와 양국 간 반부패 협력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에 방문하였다. 국민권익위는 대통령반부패자문단에게 한국의 반부패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향후 반부패 정책 추진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논의하였다.



NEWS 5

상습 침수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조정회의 진행

10월 21일 김인수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김포 집단민원 현장을 찾아 민원을 청취하고,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서울의 관순환고속도로 아래 있는 통행시설물(통로암거) 5개소가 상습적으로 침수해 인근 농경지로의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역주민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합의를 이끌어냈다.



NEWS 6

국민권익위-UNDP 반부패 협력 방안 논의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10월 6일 멕시코 마르티네즈-솔리만 UNDP 총재와 만나 한국의 반부패 정책을 세계 각국과 공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권익위와 UNDP 서울정책센터는 한국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도가 베트남에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의 반부패 정책을 보다 많은 나라들과 공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 직원의 UNDP 파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NEWS 3

정부3.0 국민체험마당 '원스톱 권익보호 서비스' 체험 전시관 운영

국민권익위는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제3회 정부3.0 국민체험마당」에 참여해 '원스톱 권익보호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을 운영하였다. 전시관에서는 '온라인 행정심판'과 '110 정부민원 전화상담'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었다. 이외에도 정부민원 방문상담 서비스를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제작된 360도 가상현실(VR) 영상을 공개하고, '공직자와 함께하는 청렴콘서트'를 선보이는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NEWS 4

외국기업 대상 청탁금지법 소개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10월 25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주최하는 「2016 암참 고위경영진 윤리경영 & 위기관리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 의의와 우리사회의 긍정적 변화 등을 소개하고 외국기업인들의 이해와 지지를 요청했다. 또한, 오후에는 국민권익위 관계자가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법 시행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통해 법의 이해를 도왔다.



NEWS 7

공공정책포럼에서 청렴 특강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월 4일, 관련 기관·단체 및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제48회 공공정책포럼에서 '청렴 대한민국,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를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지난 8월 취임 이후 전경련, 행정자치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민·관 기관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관한 교육활동을 해 왔으며, 공직자들과 국민들이 청탁금지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NEWS 8

국민안전 전문가 토론회에서 국민안전대책 제고방안 논의

이상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11월 3일, 국회에서 주최하는 「국민안전 전문가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국민안전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의 역할과 기능' 등을 소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안전사회를 위협하는 구조적 원인으로 부패를 지목하고 국민권익위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다.

Reader's Page 소통마당

독자의견

지난 호 <국민권익>을 읽고 독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입니다. <국민권익>은 관심과 참여로 만들어 나간다는 것 아시죠? 여러분의 애정어린 의견을 기다립니다. (기한: 12월 30일까지)

이번호엔 억울한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네요. 국민이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지만 때론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과세가 이루어지기도 한다니 알아두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이렇게 미리 공부해 놓으면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현아(경북 영양군)**

국가보조금 예산규모와 부정수급의 규모가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편한 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보조금의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복지 보조금 신고센터가 집중 운영된다는 것은 반갑기 그 지 않습니다. 국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하루 빨리 이런 일이 근절되기를 바랍니다. **최은경(강원 강릉시)**

이동신문고의 현장방문 기사를 읽어보면서 국민권익위가 국민들을 찾아가는 이유에 대해 많은 공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손을 뻗어 만사를 해결하듯이 국민권익위는 이동신문고를 통해 마음을 뻗어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화인(서울 금천구)**

영국이 처음부터 청렴한 국민의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중대비리조사청 설립이 중요한 계기였음을 알게 되어 놀랐습니다. 우리나라도 청탁금지법을 시작으로 청렴한 사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노재화(경기 용인시)**

‘트렌드’ 기사를 보고 노케미족이 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바쁘고 복잡하다는 핑계로 화학제품을 즐겨 쓰며 편하게만 살려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작은 것 하나에도 신경 써 우리 가족들을 위해 천연제품을 사용해야겠습니다. **왕채연(전남 여수시)**

독자퀴즈

<국민권익> 2016년 겨울호 잘 보셨나요? 이번 호 내용과 관련한 독자퀴즈입니다. <국민권익>을 꼼꼼히 읽고 빈칸을 채워주세요.

Quiz.

○○○○은 행정청의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으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을 경우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준사법적 절차이다. 특히 행정상의 문제가 법원에서 다루어지기 전에 행정기관이 스스로 판단하여 바로잡을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점이 이것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이다.

(힌트_ p.10 중인)

지난 호 정답	지난호 정답자
세계	송경희(경기 성남시) / 박숙희(강원 원주시)
음부조만협회	한지민(대전 서구) / 최정운(서울 강남구) 변미선(부산 사상구)



<국민권익>은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국민권익>을 읽고 난 소감과 바라는 점, 국민권익위를 잘 알릴 수 있는 홍보 방안 등 여러분의 의견을 적어 보내주세요. 의견과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각각 다섯 분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혼자서는 풀리지 않던 생각 국민생각함에서 풀었다!

다수인의 참여와 협업으로 행정을 개선하는 새로운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 (idea.epeople.go.kr)

대화·투표·설문함에 당신의 생각을 담아보세요. 우리 모두의 생각을 모아 정책으로 실현합니다.

